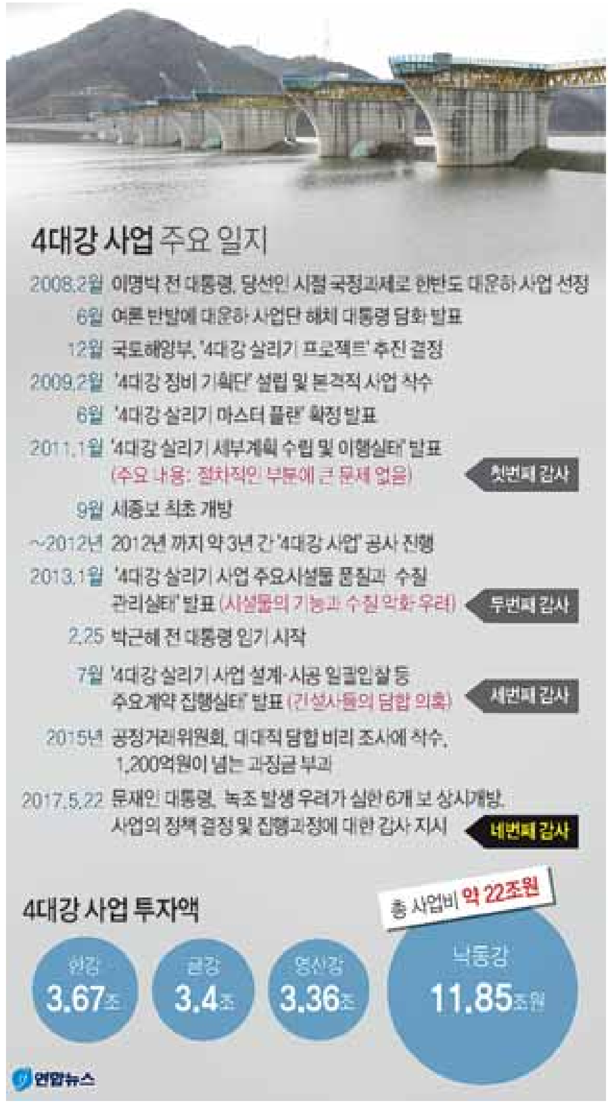
‘녹조라떼’ 사라지고 병든 생태계 살아날까



죽산보 6월부터 상시 개방…文대통령 4대강 정책감사 지시

3조3600억 투입 불구 농업용수로도 사용 못해

환경단체 “인공호수 된 강 수질악화 부작용 심각”

인근 주민들 “악취에 시달려 … 늦었지만 환영”

영산강 살리기 사업 이후 매년 여름이면 ‘녹조’로 뒤덮였던 영산강 죽산보 일대가 올 6월 1일부터는 과거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사업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하면서 3조3600억여원이 투입된 ‘영산강 살리기 사업’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보 설치 후 ‘호수화’…지난 19일 녹조 발견=한국수자원공사 영산강보관리단은 22일“승촌보와 죽산보의 수문을 닫아둔 채 물이 보를 넘어 흐르도록 해놓은 상태다”고 밝혔다.

호수처럼 물을 가둬두고 있다는 것이다. 광주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는 영산강의 유수량이 급감하고 이에 따라 남조류 세포 증식, 녹조현상 등 ‘호수화’에 따른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환경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승촌보(광주1)의 경우 지난 2012년 용존산소(mg/L)가 12에서 13.4,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2.9에서 4,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6.2에서 6.7로, 죽산보(죽산)는 11.3에서 14.1, 4.9에서 5, 9.1에서 9.3으로 각각 증가했다.

보 설치 이후 수질 수준은 오히려 하락하거나 크게 나아진 것이 없으나 영산강 살리기 사업 이후 수온이 올라가는 매년 여름이면 강을 뒤덮는 짙은 녹조 곰팡이와 악취로 수질 환경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2개의 인공보는 일정 수위를 유지시켜 농업용수 공급, 홍수 예방, 수질개선 등을 목표로 했지만 결과적으로 영산강을 거대한 인공 호수로 변화시킨 것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보 설치, 하천정비, 제방 보강 등에 3조3634억원 투입=‘영산강 살리기사업’의 사업구간은 담양 용면 가막골(용소)에서 영산강 하구둑까지로 유로 연장은 129.5km(광주 32.6km 전남 96.9km)이다.

본 사업은 생태하천정비 10개소, 94km의 하도정비, 죽산보·승촌보 설치, 17km의 제방보강, 강변저류지 1개소 설치, 홍수조절지 2개소 설치, 자전거도로 220km 조성, 하구둑 구조개선, 영산강 저수지 둑높임 등으로 모두 2조6461억원이 투입됐다.

직접 연계산업으로는 섬진강·황룡강·함평천 등의 생태하천정비, 섬진강 저수지 둑높임, 수질개선 등 3개 사업으로 7173억원을 들였다.

수질 개선, 홍수 방어, 수량 확보 등을 목적으로 한 이 사업은 완공 이후 녹조 발생, 수질 오염, 이용 인원 저조 등으로 전문가, 환경단체 등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환경단체 “수질 악화, 강 생태계 파괴 등 부작용 심각”=광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9일 이미 승촌보 일대에서 녹조를 확인하는 등 강 생태계가 병들어 가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강물에서 채취한 녹조 성분에서 강한 독성을 가진 남조류도 포함돼 있어 수질 정화를 위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영산강의 어종도 유수환경에 서식하는 고유어종 대신 정체환경에 익숙한 블루길, 베스 등 외래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지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일부 수질 문제가 아니라 강 생태계 전반이 병들어 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며 “당장 수문을 개방하고 면밀한 조사를 벌여 보를 철거할 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환경운동연합 측은 승촌보도 수질이 농업용수로도 부적합한 수준으로 녹조문제가 심각해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궁극적으로 두 보를 해체하고 영산강 하구둑 해수 유통을 통해 장기적인 복원 플랜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여름이면 악취에 시달려야 했던 인근 주민들도 정부의 조치를 크게 반기고 있다.

나주시 다시면 가흥리 2구 김성만(64)이장은 “4대강 사업으로 보를 막은 후 논에서 물이 올라와 습지화돼 트랙터가 빠져 포크레인으로 꺼내는 등 큰 고충을 겪어왔다”고 토로했다. 김 이장은 “비닐하우스에 녹조가루가 뿌옇게 덮여 심각한 상태였는데 보를 개방한다고 해 주민들이 크게 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주시 다시면 신석리 2구 정덕기(74)이장은 “자손만대 물려온 옥토가 보를 막으면서 완전히 습지로 변해버렸는데 개방한다니 마을에 가장 큰 민원이 해결되었다”며 “농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녹조가 심해 당연히 보를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나주=손영철기자 ycson@kwangju.co.kr

文대통령 4대강 타깃 적폐청산 드라이브

자원외교·방산비리 수사 확대 가능성도

MB측 “정치적 시빗거리 만들지 말라”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관련, 영산강 죽산보 등 4대강 6개 대형보를 상시 개방토록 하는 한편 정책감사를 지시함에 따라 파장과 결과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의 이날 지시가 단순히 행정적 지시를 넘어 이전 정부에 대한 ‘적폐청산’의 신호탄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22조원의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된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치적으로 내세웠지만, 수질 악화와 생태계 파괴 논란을 거듭해 왔다.

문 대통령은 이미 대선 공약집에서 4대강 사업을 재평가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선 당시 “이명박 정부에서의 4대강·방산·자원외교 비리도 다시 조사해 부정축재 재산이 있다면 환수하겠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이날 “감사는 개인의 위법·탈법행위를 적발하려는 것이 아니고 정부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 교훈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걸쳐 이미 세 차례나 진행된 4대강 사업 감사를 전면적으로 재실시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사업의 ‘비정상적’ 추진경위를 반드시 따져보겠다는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 수석도 “감사과정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나타날 경우 상응하는 방식으로 후속처리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우에 따라 감사가 검찰 등의 수사로 이어질 수 있어 이명박 정부 당시 정책 전반에 관여한 관여자는 물론 이 전 대통령이 수사 선상에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4대강 사업과 더불어 이명박 정부의 ‘적폐’로 꼽은 자원외교와 방산 비리로까지 감사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제17대 대통령 비서실 명의로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정부는 감사와 재판, 평가가 끝난 전전(前前) 정부의 정책사업을 또다시 들춰 정치적 시빗거리를 만들기보다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후속사업을 완결하고 확보한 물을 잘 관리하여 당면한 가뭄을 극복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도식을 하루 앞둔 22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노 전 대통령 추모 헌다례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文대통령 취임후 첫 휴가 ‘양산 구상’ 내용 뭘까

정부조직 개편·내각 인선 관심

오늘 노무현 8주기 추모식 참석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취임 후 첫 연차 휴가를 내고 경남 양산 사저에 머무르며 구상한 향후 국정운영 방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조직개편안 마련을 비롯, 사회부총리 등 내각 인선, 청와대 참모진 구성 등 굵직한 숙제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당장 외교·안보 라인의 구축은 절반에 그친 가운데 국방부장관과 통일부 장관 인선이 주목되고 있다. 여기에 사회부총리를 필두로 한 노동·보건복지·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등 사회·문화팀의 구성도 아직 미완성이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를 떠나 비교적 차분하고 조용한 분위기의 사저에서 마음을 가다듬고 내각과 청와대 인선에 심혈을 기울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전날 북한이 문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번째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을 계속하는 데 대한 대응방안을 숙고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여가는 만큼 문 대통령이 서둘러 통일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 등 외교·안보라인 인선의 남은 퍼즐을 맞추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와 함께 6월 말로 예상되는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서도 다각적인 검토가 이뤄졌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23일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8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후, 서울로 돌아올 예정이며 이날 추모식에서 어떠한 메시지를 제시할 것인지도 관심사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